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2학기부터 사용

김승환 교육감 “출판사 선정 작업도 신중해야”...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배제에 “원칙적 대응”

전북도교육청 주도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올해 2학기부터는 교실 수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시기가 중요하다”면서 “올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늦어도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출판사 선정 작업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교육부가 아직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과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은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국제인권수준에



“특검 연장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세번째) 의원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특검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한참 못미친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3개의 원칙, 즉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원칙

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해은 기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 선임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이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9일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도위원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과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빛꽃대선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공동대표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원외대표로 뽑히신 사공정규 위원장님과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공약발굴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의회 환복위, 익산 악취 현장 방문 해결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익산 합리면에 위치한 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견을 듣고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이날 공장 주변을 둘러보며 악취방지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악취저감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공장에서 유출되는 폐수를 채취해 관계기관에 오염도 측정용 의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의료원으로 이동해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호자 없는 포괄간호서비스와 말기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둘러봤다. /인재용 기자

현재 ‘중대 결심’... “변론계속”朴요구 단칼 거부

증인 철회·내달 최종 변론 연기 요청도 사실상 거부 시사... 김평우 변호사 “함부로 진행말라” 재판부 항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심’이 엇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속수무책이었다.

현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 등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3월2~3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하겠다고 사시상 거부하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현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자 대리인 측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여보자는 요청은 물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탄핵심판 막바지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내용은 카드마다 가로막힌 셈이다.

◇최종변론 연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 이날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은 박 대통령이 현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특히 현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일단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며 확정하지는 않았다.

현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미루면 오는 3월13일 퇴

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추면 선고가 13일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된다.

마지막 남은 상황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도 3월13일 선고가 가능한 오는 27일이나 28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충안이다.

현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3월9~10일 선고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칼자투는 여전히 현재가 쥐게 된다.

현재 안팎에서는 오는 27일이나 28일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함부로 재판 진행”... 박 측, 강력반발 이같은 현재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걸 말이 안 된다”며 “12시에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고성을 질렀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끝내고 퇴정했다.

이중환 변호사도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심리 진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재가 녹음파일에 대해 다시 증거신청을 낼 방침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겠다”며 말을 아끼 채 달리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뉴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